



의안번호	제 2010 - 18호
의 결 연 월 일	2010. 10. 11. (제28차 회의)

보  
고  
안  
건

##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 목 차

I. 1팀 회의 .....	1
1. 제31차 회의 .....	1
가. 일시·장소 .....	1
나. 참석자 .....	1
다. 주요 안건 .....	1
라. 회의 요지 .....	1
2. 제32차 회의 .....	3
가. 일시·장소 .....	3
나. 참석자 .....	3
다. 주요 안건 .....	3
라. 회의 요지 .....	3
II. 2팀 회의 .....	6
1. 제23차 회의 .....	6
가. 일시·장소 .....	6
나. 참석자 .....	6
다. 주요 안건 .....	7
라. 회의 요지 .....	7
2. 제24차 회의 .....	8
가. 일시·장소 .....	8
나. 참석자 .....	8
다. 주요 안건 .....	8
라. 회의 요지 .....	8
3. 제25차 회의 .....	10

---

가. 일시·장소 .....	10
나. 참석자 .....	10
다. 주요 안건 .....	11
라. 회의 요지 .....	11
 III. 제29차 전체회의 .....	 12
1. 일시·장소 .....	12
2. 참석자 .....	13
3. 주요 안건 .....	13
4. 회의 요지 .....	13
가.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 .....	13
나. 제3차 공청회 제기 쟁점에 관한 범죄군별 검토 .....	16
 IV. 향후 일정 .....	 24
 별첨 김현석,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방안 관련 검토”	
김현석,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검토(2010. 10. 4.)”	
김현석,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검토(1팀 회의자료)”	
김현석,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검토(2010. 10. 4.)”	
김현석,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검토(1팀 회의자료)”	
박영식, “약취·유인범죄 공청회 제기 쟁점별 검토 의견”	
정준화, “절도범죄 양형기준안의 추가 검토”	
서봉규, “제3회 공청회 관련 절도 양형기준 논의사항”	
박영식, “약취·유인범죄 집행유예 기준(안)”	
정준화, “절도범죄 집행유예기준(안)”	
김현석, “사기범죄의 개요 및 관련 자료”	
김현석, “사문서범죄의 개요 및 관련 자료”	

---

정준화,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서봉규, “마약범죄군 양형기준 초안”



# I. 1팀 회의

## 1. 제31차 회의

### 가. 일시·장소

- 일시 : 2010. 9. 2.(월) 16:20 ~ 18:20
- 장소 : 대법원 235호 회의실

### 나. 참석자(4명)

- 김현석(팀장), 범현, 조은경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 다. 주요 안건

-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
- 제3차 공청회 대상범죄(공문서, 식품·보건범죄)의 양형기준안 관련 공청회 제기 쟁점에 관한 검토
- 기타 논의

### 라. 회의 요지

#### (1)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

- 양형기준 수정시기와 관련하여 논의한 결과, 개정 형법 시행일(2010. 10. 16.)이 다가왔으므로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 수정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짐
- 양형기준 수정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유기징역형 상한 상향 조정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분(권고형량

범위가 무기징역 또는 징역 15년인 영역)만 수정을 요한다는 의견

- 현재 형사재판실무에서의 양형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형법이 개정된 것이므로 양형기준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

- 다음 회의시까지 형법 개정의 취지,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외국의 사례, 구체적인 양형기준 수정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함

## **(2) 공문서범죄 양형기준안 관련 공청회 제기 쟁점에 관한 검토**

- 형량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법정형에 비하여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너무 낮다는 의견

-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1/2 가중되며, 실제 판결례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권고형량으로 대부분의 선고형량을 포섭할 수 있다는 의견

-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와 관련하여, 특별양형인자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1기 양형기준부터 누범이 아닌 동종전과는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만 규정하여 왔으므로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 ‘전문적 장비’와 관련하여, 그 예시로 들고 있는 ‘컬러프린트, 스캐너’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비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제 사례에서는 장비를 이용한 범행이 많지 않으므로 존치되어야 한다는 의견

## **(3)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안 관련 공청회 제기 쟁점에 관한 검토**

- 유형분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허위표시유형에서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세부유형을 구분하되, 거래 규모는 사업장의 규모, 거래기간, 범죄사실 기재 거래기간 내의 수입 등을 참작해서 판단하고, 거래 규모에 관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제2유형으로 포섭한다는 서술을 추가하여 명시하기로 하는 데 의견이 모아짐
-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수사 개시 후 내부비리를 고발한 경우도 ‘자수 또는 내부비리고발’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2. 제32차 회의**

### **가. 일시·장소**

- 일시 : 2010. 9. 29.(수) 16:20 ~ 18:30
- 장소 : 대법원 406호 회의실

### **나. 참석자(4명)**

- 김현석(팀장), 심재철, 이상원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 **다. 주요 안건**

-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
- 사기, 사문서범죄 양형기준안 설정방안 검토
- 기타 논의

### **라. 회의 요지**

**(1)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

○ 형법의 개정취지 및 양형기준의 수정범위 및 수정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형법의 개정취지는 모든 범죄의 선고형량을 상향하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양형기준이 종래의 선고형보다 이미 상향조정되어 있으므로 전반적인 양형기준의 상향조정은 필요 없다는 의견

- 만일 전반적인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시간을 두고 개정 형법 시행에 따라 실제 선고형량이 증가하는지 추이를 살펴보면서 점차적으로 양형기준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우리나라 수형시설이 한정되어 있고 단기간에 수형시설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법무부 교정국에 사실조회를 해보고 회신된 수형시설의 현황도 양형기준 상향조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 수형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선불리 상향조정하게 되면, 교정당국에서는 가석방 기준을 완화하여 운영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유기징역형이 낮은 형법 하에서 비교적 낮은 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이 유기징역형이 상향조정된 형법 하에서 비교적 높은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비하여 쉽게 가석방이 되는 혜택을 누리게 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다는 의견

- 현재 수용시설이 포화상태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하더라도 그로 인해 수용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고, 수용시설을 증설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도 않으므로 수용시설이 양형기준 수정에 있어서 고려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



- 우선 살인죄만 대상으로 하여, 형법상 살인죄와 강간살인과 강도살인 등 다른 살인범죄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양형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본 뒤, 다른 범죄군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수정하자는 의견

- 법정형에 사형, 무기징역이 규정되어 있거나, 징역형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예컨대 ‘징역 3년 이상’) 범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을 수정하되, 그러한 범죄 전부에 대해 양형기준을 수정하자는 의견과 그런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상의 형량이 적정한지 검토를 거쳐 상향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개정하자는 의견

- 위와 같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양형기준 수정 여부가 갈리게 되면 법정형을 정한 입법자의 의도로는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할 범죄들 사이에 불균형이 생기게 되므로 부당하다는 의견

○ 다음 회의시까지 운영지원단장이 아래 사항을 준비하기로 함

- 현재 수형시설 현황에 관한 법무부 교정국에 대한 사실조회
- 살인, 강도, 성폭력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최근 선고형 통계

## **(2)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 사기범죄의 양형기준 설정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사기죄는 재산범죄이므로 피해금액이 가장 기본적인 유형분류 기준이 되어야 하며, 범행수법은 양형인자로만 고려하면 충분하다는 의견

- 사기범죄와 횡령·배임범죄는 모두 재산범죄이므로 경합범인 경우 피해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에 적용하자는 의견

-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다소 형식적 기준이 되어 실질적 피해

액이나 피해회복된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사기범죄는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므로, 범행수법의 태양을 기준으로 유형분류를 하고 피해금액은 특별양형인자로 처리하자는 의견

– 범행수법의 태양을 기준으로 하면 모든 경우를 포섭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는 의견

### **(3) 사문서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 사문서범죄의 양형기준 설정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사문서위조는 대부분 사기범행과 연관되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반영하는 것에 그치고 별도로 사문서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

–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 없이 사문서를 위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의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II. 2팀 회의**

### **1. 제23차 회의**

#### **가. 일시·장소**

○ 일시 : 2010. 9. 6.(월) 16:00 ~ 18:00

○ 장소 : 대법원 235호 회의실

#### **나. 참석자(4명)**

○ 서봉규(팀장), 강우예, 박영식, 정준화 전문위원

#### 다. 주요 안건

- 약취·유인, 절도범죄에 관한 공청회 주요 토론사항 검토
- 기타 논의

#### 라. 회의 요지

##### (1) 약취·유인범죄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범위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결혼 목적 약취·유인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데에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짐
-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적절한지에 관하여는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 ‘실제 취득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요구한 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와 관련하여 요구·취득 금액을 가중인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지적 장애 상태인 경우’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2) 절도범죄

- 절도범죄의 공청회 제기 쟁점에 관한 검토는 다음 회의 시에 하기로 함

## 2. 제24차 회의

### 가. 일시·장소

- 일시 : 2010. 9. 16.(목) 16:00 ~ 18:00
- 장소 : 대법원 235호 회의실

### 나. 참석자(4명)

- 서봉규(팀장), 강우예, 김혜정, 정준화 전문위원

### 다. 주요 안건

- 절도범죄에 관한 공청회 주요 토론사항 검토
- 약취·유인, 절도범죄의 집행유예기준안 검토
- 기타 논의

### 라. 회의 요지

#### (1) 절도범죄에 관한 공청회 주요 토론사항 검토

- 피해가액의 양형기준 반영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피해가액이 반드시 우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 금액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범인이 그 이익을 향유하는 이상 피해가액이 큰 절도범행에 대하여 더 큰 처벌을 하는 것이 법감정 및 상식에 부합하며, 현 양형기준은 3회의 경합범까지만 가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 범행에 대한 충분한 기준 제시기능이 미약한 실정이어서 피해금액의 증가에 따른 형량범위의 증가가 필요하므로 횡령·배임범죄의 양형기준과 같이 피해금액에 따른 유형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

- 공청회 양형기준안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재물에 대한 절도를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로 별도 유형 분류를 하였고,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가치의 상대적 경중에 따라 제1유형 및 제2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에 있어서도 재물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제1유형(방치물등 절도)에 포섭되는 등 피해금액적 요소를 이미 상당히 반영하였고, 상당한 피해금액이 있는 경우 대부분 수차례 반복된 범행의 누적금액인데, 이를 유형분류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경합범의 처벌과 특가법의 존재로 인하여 중복평가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 형량범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1,000만원 이상 임산물절도에 대하여 무기 또는 징역 5년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의 기본영역은 징역 2년~4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부당하고,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의 경우 서술식 기준으로 제1유형 및 제2유형 감경영역 하한을 3년 및 5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경우 기본영역의 하한과 같아지거나 더 높아지는 모순이 초래된다는 의견

- 제2유형 중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1.5배 가중한다는 서술식 기준이 있으므로 기본영역에 있어서 법정형 하한보다 높은 형량범위가 포함되므로 부당하지 않다는 의견

-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과 관련하여 상습·누범절도 유형의 영역별 형량범위를 재검토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의 절도’의 유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중요한 산업기술의 평가액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산업기술과 비밀을 분리하여 산업기술은 제2유형에, 비밀은 제1유형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산업기술과 기업비밀은 그 중요성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금액을 환산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이 기업비밀보다 반드시 상대적 가치가 더 높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제1유형으로 존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 **(2) 절도범죄 집행유예기준안**

○ 절도범죄 집행유예기준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우발적·충동적 범행’을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및 특별히 ‘우발적·충동적 범행’을 집행유예의 긍정 사유로 참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부과기준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동종 전과’에 강도범죄의 전과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약물 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이 절도범죄의 참작사유로서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의견

– ‘생계유지 목적’은 재범의 위험성과 무관하므로 집행유예 참작사유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

## **3. 제25차 회의**

### **가. 일시·장소**

○ 일시 : 2010. 9. 29.(목) 16:00 ~ 18:00

○ 장소 : 대법원 235호 회의실

### **나. 참석자(3명)**

- 서봉규(팀장), 강우예, 정준화 전문위원

#### 다. 주요 안건

- 제4차 공청회 대상 범죄(공무집행방해,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 기타 논의

#### 라. 회의 요지

##### (1)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 모욕, 인권옹호직무방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및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공직선거법)를 대상범죄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
  -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 모욕, 인권옹호직무방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는 공무집행방해범죄와 행위주체, 대상 또는 태양이 다를 뿐만 아니라 범죄발생빈도가 낮으므로 제외함이 타당하고,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선거범죄의 양형기준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 형량범위
  - 법정형이 동일한 위증죄의 형량기준과 비교하여 형량범위의 비교 및 균형이 필요하다는 견해
  - 위증죄와 법정형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권고형량범위가 동일할 필요는 없고, 당해 범죄의 특성 및 선고형 분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 ‘처벌불원’의 양형인자 반영 여부
  - 공무집행방해범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가 아니므로 특별감

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

-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무효·파과유형에서는 일반감경인자로, 특수공무방해치상범죄에서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 기타 양형인자

- ‘반복적 범행’은 특별가중인자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견해
-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의 구체적 의미가 모호하므로 정확한 개념 규정 및 구체적 사례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견해
- 특별가중인자의 개수와 비교하여 특별감경인자의 개수가 적으므로 특별감경인자의 추가 또는 발굴이 필요하다는 견해

**(2)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 유형분류

- 각 대유형별 세부 유형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견해
- 마약의 수량을 기준으로 세분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

### **Ⅲ. 제29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0. 10. 4.(월) 16:40 ~ 22: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2. 참석자(9명)

- 수석전문위원, 강우예, 김현석, 범현, 서봉규, 심재철, 이상원, 정준화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 3. 주요 안건

-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
- 제3차 공청회 제기 쟁점사항에 관한 범죄군별 검토(집행유예기준안 포함)

## 4. 회의 요지

### 가.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

#### (1) 양형기준 수정범위

- 양형기준 수정범위는 형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좌우되는바, 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 간 형벌 효과를 줄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에 따른 형벌을 선고하는 데 존재하는 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 개정 취지이므로 중대 범죄에 국한하여 양형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짐
- 다만, 수정 여부 검토대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현행 양형기준은 서술적(descriptive) 양형기준방식 및 규범적(normative) 양형기준방식을 혼합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양형실무를 기반으로 해서 다소 규범적 상향 조정을 한 것이므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가 무기 또는 징역 15년이 포함된 범죄 유형의 가중영역을 검토대상으로 삼되, 형량범위를 상향 조정할 경우 감경 및 기

본영역의 형량범위의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

-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비록 범죄의 죄질 및 사회적 중대성에 있어서 형량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없는 범죄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형량범위 내에서 양형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법정형의 하한만 정하여진 범죄 모두를 검토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

- 통계적 선고형량 및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가 징역 15년에 미달하는 영역, 예를 들어 형량범위가 5년~8년으로 되어 있는 범죄까지 변경하거나 검토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

- 입법자가 기존의 법정형이나 선고형이 낮았다고 평가한 것이라면, 유기징역형 상한 상향 조정 후 개별 법정형의 추가적인 상향 조치를 하였을 것이나, 성범죄의 특수한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승 이외에 입법자의 추가 조치가 없었으므로 살인 및 성범죄를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나, 성범죄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6. 29. 형량범위를 상향 조정한 수정 양형기준이 의결, 시행되었으므로 살인범죄를 주요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2) 양형기준 수정방안

- 살인범죄의 양형기준을 대상으로 하여 ① 유형의 추가 방안, ② 가중영역의 상한 조정 방안, ③ 유형의 재분류 방안 등의 양형기준 수정방안을 상정할 수 있는데, ① 유형의 추가 방안 또는 ③ 유형의 재분류 방안을 중심으로 수정방안을 연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짐
-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구체적인 수정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살인범죄 판결례 중, 징역 15년을 초과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였으나 유기징역형 상한의 존재로 인하여 15년을 선고한 사례, 무기징역형보다는 낮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였으나 유기징역형 상한의 존재로 인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를 수집하여 좀 더 구체적인 유형화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
- 현행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제3유형에서 제4유형을 분리, 신설하는 작업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
- 재범의 위험성이 강하게 표출되는 살인 유형, 예를 들면 살해욕의 발로 또는 조직폭력배 간의 집단적 싸움에 기한 살인 등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 요소에 착안을 하여 살인범죄 유형을 재분류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는 의견
- 동기를 기준으로 살인범죄의 유형분류를 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으로 별도의 유형분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복합적 기준을 사용할 경우 포섭되지 않는 살인범죄 유형이 발생할 가능성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
- ‘2인 이상 살해’를 별도의 유형으로 검토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 피해자별 범죄태양 및 양형인자가 다르므로 양형인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 현행 양형기준은 종래의 양형실무에 비하여 규범적 관점에서 이미 상당히 상향조정되어 있음에도 유기징역형 상한이 상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수정방안 논의시 ‘2인 이상 살해’를 유형분류기준으로 반영할 것인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것인지, 유형분류기준을 단일한 기준에 기초할 것인지, 복합적 기준 또는 구체적 사례에 기초할 것인지, 권

고형량범위의 상한을 개방식으로 규정할 것인지, 일정 형량 이하의 형량만 규정할 것인지 다각적인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 주무전문위원을 정하여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초안을 작성하게 한 후 전문위원 회의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운영지원단에서 살인범죄 중 징역 12년 이상 선고된 1심 사건의 판결문을 추출해서 정리한 결과를 제공하기로 함

#### 나. 제3차 공청회 제기 쟁점에 관한 범죄군별 검토(집행유예기준안 포함)

##### (1) 공문서범죄

###### (가) 유형구분 및 형량범위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공문서 위조·변조 등 유형’에 포함시킨 것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양형기준안대로 ‘공문서 위조·변조 등 유형’에 포함시키고, 일반감경인자로 존치하는 데 이견이 없음

###### (나) 양형인자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의 정의규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의규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다량의 문서’의 범위가 모호하므로 문서의 매수(건수)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5매 이상의 문서 위조와 같이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위조문서의 구체적 매수를 특정하게 되면, 그 이하의 위조문서의 경우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매수보다 문서 자체의 중요성 또는 명의인의 수가 중요한 경우도 많다는 의견

- 행위의 반복성에 가중처벌의 근거가 있으므로 실무에서 행위의 반복성에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위 양형인자를 적용하면 충분하다는 의견

- ‘전문 위·변조장비(칼라프린트,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에서 칼라프린트나 스캐너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실제 문서 위·변조 사안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대체적 의견이 모아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의 적정성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대체적 의견이 모아짐
- ‘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회복의 방해’는 일반양형인자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와 중복되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다수의견임
- ‘국외추방이 예상되는 경우’는 일반양형인자로서 부적절하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다수의견임

## (2) 식품·보건범죄

### (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 무허가(신고) 영업행위의 대상범죄 포함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식품·보건범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범죄이고,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역시 국민 건강 및 위생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므로 기존 양형실무에서 주로 벌금형이 많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규범적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

- 무허가 영업행위는 단속법규위반의 행정법적 성격이 강하여 실행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지 않고,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와 같이 위해성이 현저하거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무허가 영업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상 범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의 대상범죄 포함 여부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1팀회의에서 의료기기법 위반 범죄의 구성요건, 법정형, 실제 판결 사례 및 선고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나) 양형인자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내부비리 고발’의 요건이 너무 엄격한바, 수사 개시 이전에 순수한 마음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므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수사협조를 적극적으로 한 경우도 포함시키는 등 양형인자의 포섭범위를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현행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와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면책적인 실무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의 규정으로서 ‘자발적 동기’란 것이 반드시 다른 개인적 목적 없이 순수한 동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포섭범위가 좁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

### (3) 약취·유인범죄

#### (가) 적용범위 및 형량범위

○ 양형기준의 적용범위가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범죄임을 ‘적용범위’에서 명시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짐

○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유형

– 재물 등 요구행위인 제1유형의 형량범위가 재물 등 취득행위인 제2유형의 형량범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바, 유괴시점부터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실제 사례에 있어서는 요구행위를 한 경우가 죄질이 더 나쁜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유형 사이에 형량범위의 차이를 크게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

– 재물 등 취득행위인 제2유형까지 나아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신체 또는 생명을 침해한 경우가 많고, 범행 착수단계부터 유괴 목적 및 신체침해의 고의성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마 및 가족들에게 끼친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는 엄청나고, 재물 등을 요구했다가 반성해서 취득을 포기하고 범행을 중지하게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재물 등 요구행위와 취득행위 사이에 형량범위의 차이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나) 양형인자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지적 장애상태인 경우’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어느 정도의 신체장애적 요소는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신체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 및 판단능력이 떨어져 방어능력이 떨어진다면 지적 장애상태에 해당될 것이므로 ‘청각 등의 신체장애’를 특별가중인자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청각 등의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 약취·유인범죄의 수단에는 기망 이외에 물리력도 포함되어 있는바, 신체 장애인도 어느 정도 판단 및 의사결정능력, 상황대처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보호의 필요

성이 높으므로 신체장애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의 구체적 사례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규정이 있으므로 특별히 구체적 사례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 감금 및 유기 경우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의 규정이 없으므로 유기의 경우 ‘발견이 곤란한 장소 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한 장소에 유기하는 경우’로 규정하자는 의견

– ‘피해자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는 행위’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

– 구성요건상 행위유형인 ‘폭행’, ‘상해’, ‘감금’, ‘유기’, ‘가혹행위’마다 대표적인 구체적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을 한 경우’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지적 장애상태인 경우’보다 가벌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지적 장애상태인 경우’는 원래부터 범죄방어능력이 취약한 데 반하여,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여 범행을 한 경우’는 처음에는 범죄방어능력이 더 높거나 방어기회가 더 많은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보호가치 필요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일반가중인자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실제 취득한 채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요구한 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요구 가액과 취득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 뇌물죄에서 요구행위와 취득행위를 처벌에 있어서 구별하는 것과 같이 약취·유인죄에 있어서도 실제 취득한 경우를 요구행위와 구별하



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요구 및 취득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할 경우, 피해자의 자력 정도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이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 특정 금액을 규정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취득하는 경우’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특별감경인자의 추가 또는 수정 여부

- 특별가중인자의 개수에 비하여 특별감경인자의 개수가 너무 적으므로 ‘피해자에게 특별한 신체적 해악을 가하지 않고 안전하게 데리고 있었던 경우’ 또는 ‘약취·유인의 상태가 매우 짧은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피해자에게 신체적 침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를 기본 범죄로 상정한 것이고, 신체 침해를 한 경우를 중한 유형으로 설정하고, 감금의 기간이 긴 경우를 특별인자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데리고 있는 경우’ 또는 ‘약취·유인의 상태가 매우 짧은 경우’를 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중복평가의 문제가 발생하여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는 매우 중요한 감경인자로서 여타 양형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2배 또는 3배의 가중치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어떤 양형인자가 다른 양형인자보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가중치를 2배로 평가할지, 3배로 평가할지에 관한 객관적 기준이 없고, 양형인자에 대하여 가중치를 주거나 수치화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고, 양형기준의 기본원칙에 반하므로 부당하다는 의견

(다) 집행유예기준안

- 집행유예기준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집행유예기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 적용현황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
  - 형사판결문에서 일반참작사유를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집행유예기준 적용현황분석이 쉽지 않으므로 대안을 강구한 다음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4) 절도범죄

##### (가)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 피해금액의 반영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방치물등 절도)과 제2유형(일반절도)를 피해가액을 기준으로 세부 유형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피해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는 드물고, 만약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범죄 유형분류의 특징이 희석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의견
  - 일반재산과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의 대유형 구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의 세부 유형 구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방치물등 절도의 구분 등의 유형분류에서 피해물의 금액 또는 가치적 요소가 많이 반영되었고, 양형인자에서도 이를 반영하였다는 의견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2유형(일반절도)과 4유형(침입절도)의 형량범위
  - 양형자료 통계분석결과 2유형 해당 범죄와 4유형 해당 범죄의 선고형 차이가 별로 없음에도 4유형의 형량범위를 높게 설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

- 규범적 관점에서 침입절도의 죄질을 일반절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하고, 팀별회의에서도 침입절도를 현행 양형실무보다 권고형량범위를 올려야 한다는 견해가 압도적 다수였다는 의견

○ 상습·누범절도의 유형분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상습·누범절도에서도 대인절도 및 침입절도의 상습범 또는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대인절도, 침입절도의 세부유형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

- 특가법은 행위불법성이 높은 상습·누범 절도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개별 절도 행위유형의 죄질 차이는 흡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전과범죄의 절도 유형에 따라 가중처벌할 경우 전과를 과대 반영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전과 범죄의 절도 유형과 당해 범죄의 절도 유형이 다른 경우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세부 유형구분이 필요 없다는 의견

○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의 절도’

-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에서 제2유형에 포섭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 제2유형에 해당되는 범죄는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게 규정된 범죄인 점,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가 제2유형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준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유형에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나) 양형인자

○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 절도범죄에 있어서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이 중요하므로 전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가

중인자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행 양형기준에서 전과의 양형인자 규정방식의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

- 재범의 위험성은 책임이 아니라 예방 영역이므로 집행유예기준에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양형인자표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

○ ‘동종전과’

- 절도범죄에 있어서 동종전과에 ‘강도범죄의 전과’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견해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 흉기 휴대절도만큼 가벌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양형인자로 존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 미수범의 양형인자 반영 여부

- 중지미수의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장애미수의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미수범의 양형인자 반영은 필요할 수 있으나,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

## IV.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30차 전체회의는 10. 22. 15:00에 개최하기로 함